

정부는 대한민국명장 활동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5.26.(금) 파이낸셜뉴스, “활동은커녕 생사도 몰라...신뢰 잃은 ‘대한민국 명장 제도’” 기사

○ (전략) 법을 기반으로 정부가 명장을 선정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. (중략) 선정된 현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다. (후략)

2. 설명내용

-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이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명장들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
- 또한,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가진 대한민국명장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
- 대한민국명장 등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등에 숙련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
 -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제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최고의 숙련기술이 후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
 - 한국잡월드와 함께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인이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청소년에게 숙련기술의 이해 체험 및 진로탐색 상담 등 체험형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
-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이 산업활동에 종사하면서 숙련기술을 발전시키고 숙련기술 전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

담당 부서	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	책임자	과 장	김동욱 (044-202-7286)
		담당자	주무관	류정우 (044-202-7297)